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mhcho@kiep.go.kr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김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kimhs@kiep.go.kr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hykeum@kiep.go.kr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gang@kiep.go.kr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대응 방향

## 주요 내용

- ▶ 미국발 관세장벽의 글로벌 확산 추세
  - 국제 관세 질서가 WTO가 주도하는 기존의 '규범 중심'에서 일방주의와 '힘 중심'으로 재편되고, 관세는 단순 무역 보호 차원을 넘어 마약 관리, 국제수지 개선, 대외 투자 유치 및 자국 산업 육성 자원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됨.
  - 트럼프 2기는 규범 내 예외 조항을 쓰던 1기나 바이든과 달리, IEEPA(국제긴급경제제한법) 등을 통해 보편·상호관세로 압박 수위를 높임.
  - 주요국들은 국제 공조와 보복 관세, 투자-면세 패키지 딜, FTA 네트워크 등으로 대응
- ▶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의 사후적 영향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 감소, EU, 멕시코 등 주요국 비중 증가, 중국 수출시장에서 미국 비중 감소, 베트남, 인도 등의 비중 증가 / 한국 수출시장에서 중국 비중 감소, 미국 비중 증가,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중국 비중 증가
  -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 제3국(40개국 전체)의 경우 국별 이질성 등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양(+)의 증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부 양(+)의 간접효과
-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사전적 영향
  -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관세로 인해 단기에 큰 가격 상승과 무역 위축을 유발하고, 장기에는 공급자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그 충격이 완화되지만 무역과 실질임금의 손실은 상당 부분 잔존함을 확인
  - 미국은 광범위한 IEEPA 및 232조 관세로 인해 산업별로 가격이 3~33% 이상 상승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하락 /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나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과 우회 효과로 총수출의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내수 물가 하락과 명목임금 감소가 겹치면서 후생은 감소 / 한국은 대미 수출 감소와 후생의 하락이 나타나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
- ▶ 대응 방향
  -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 우회수출에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 국내 피해기업 지원 확대
  - 산업정책-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미국발 관세 장벽의 글로벌 확산

-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발 관세장벽이 더욱 확산하는 양상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가 중국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
- 주요국들은 국제 공조와 보복관세, 투자-면세 패키지 딜, FTA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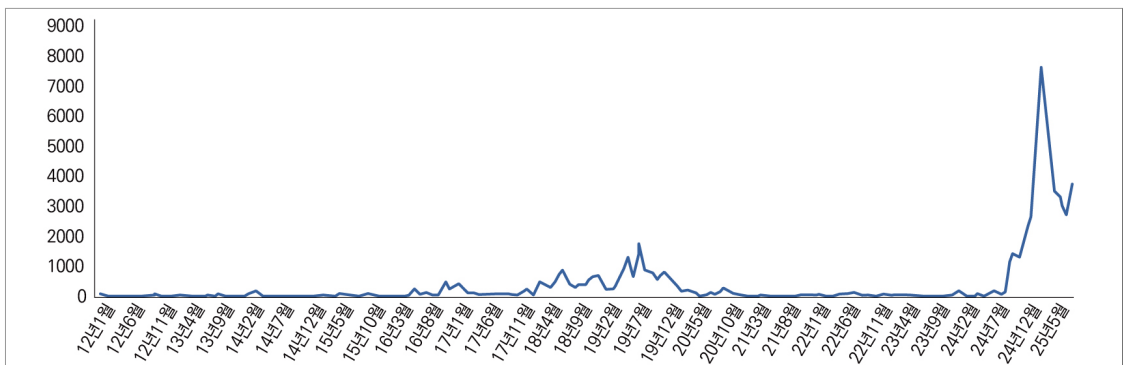
###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은 한국경제에 구조적 위협

- 한국은 수출 주도형 통상정책 추진
  - WTO 체제 이후 세계는 무역 자유화와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국면
  - 2000년대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무역협정이 확산되었지만, 최근 관세정책이 다시 주요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회귀하는 양상
- 미·중 통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 요인

###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가

- 1995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에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안정을 찾았으나 2024년 말 이후 급격히 증가

그림 1.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1995. 1.~202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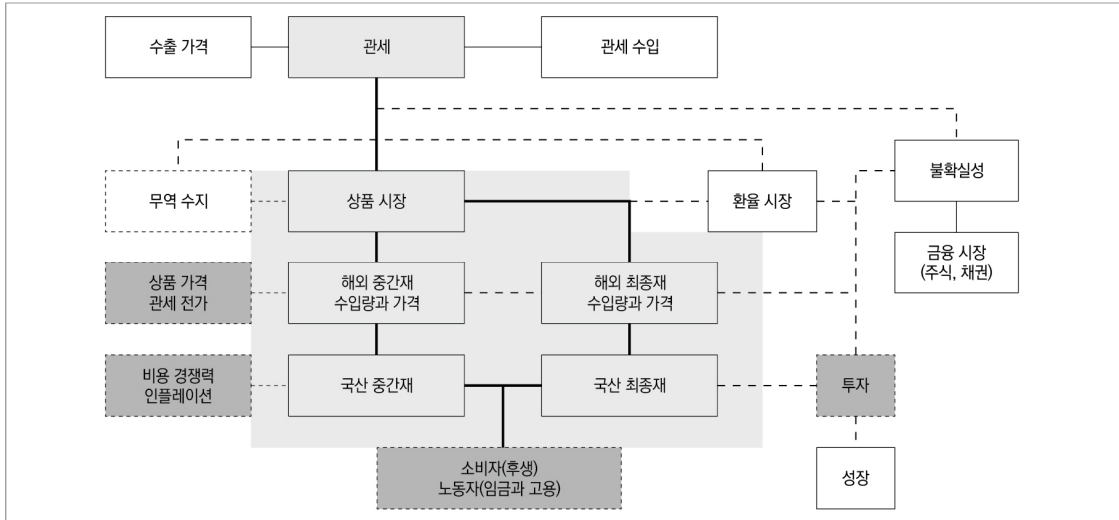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 2025. 10. 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의 파급 경로와 관련 경제 변수

- 한 국가의 관세율이 오르면, 세계 생산과 무역 네트워크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계 무역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침.

그림 2. 관세의 파급 경로와 관련 경제변수



자료: 저자 작성.

● 경제학적 분석과 통상법적 검토를 결합해 관세장벽 재부상의 배경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규명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글로벌 관세 정책의 전환: 규범에서 힘 중심의 통상 질서

① 관세 패러다임의 변화: '규범(Rule) 중심'에서 '힘(Power) 중심'으로

●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 확대

- 기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 금지 등 환경·인권 규범 준수 비용의 가격화가 있어왔으나 최근 미국발 관세정책은 마약 관리 규제, 국제수지 흑자국에 대한 상호 관세, 상대국 국내 정치 상황 등 비경제적·일방적 사유로 확산

### ● 다자무역체제(WTO)의 무력화

-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누적된 WTO 판례를 토대로, 다자간 사법 체계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소기구 선임을 거부하는 등 국제통상 질서의 공백을 야기함.
- 미국은 WTO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자국 내 법적 수단을 동원한 일방주의적 대응을 본격화함.

### ● 대내외 정책적 유인

-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도구로 관세 활용
- 관세 위협 후 양허·투자 약속을 전제로 감면해 주는 '조건부 개방' 패턴화
- 재정 보조로 '자국 산업 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정치적 명분

## ② 미국 행정부별 관세정책 추이 및 특징

### ● 트럼프 1기: 법적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관세정책의 형식적 정당성 확보

- 핵심 수단
  -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부과
  - 무역법 제301조: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복 관세 시행
  - 무역법 제201조: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결과: 사실상의 보호주의로 인해 다수의 WTO 분쟁 발생 및 패소

### ● 바이든 행정부: 기존 조치의 소폭 수정 및 전략적 유지

- 대규모 신규 관세는 억제했으나, 국익을 위해 기존 트럼프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소폭 재편 또는 유지에 그침.
- 우호국(EU, 일본)에 대한 제232조 관세 일부 완화, 태양광 201조 연장, 대중 제301조 유지 및 2024년 일부 품목 관세 인상

### ● 트럼프 2기: 힘 중심의 일방적인 관세정책 및 통상 압박 극대화

- 규범보다는 힘에 기반한 일방주의 전략
-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특정 품목 관세뿐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전 품목 보편관세(10%), 무역수지적자 기반 상호관세, 마약관세 등 도입

### ③ 주요국 대응 전략

- 미국의 압박 강도와 자국의 경제 구조에 따라 강경 대응(중국), 실리 추구 및 동맹 강화(EU, 한국, 일본)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
  - 중국: WTO 제소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반발,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기술 자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현재 미국과 휴전 합의
  - EU: 보복관세를 준비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김, 미국 요구에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 조사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보조를 맞춤
  - 캐나다: 즉각적인 보복 조치와 협상을 병행
  - 멕시코: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FTA 미체결국(중국 등)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하는 등 미국의 정책 방향에 협조
  - 인도: 미국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보류하고 자급자족 정책을 내세우고 제조업 육성을 통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브라질: 국내적으로는 '경제상호주의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협상에 집중
  - 한국, 일본, 영국 등은 미국과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여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대미 투자 약속 등을 대가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확보

## 2)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의 영향

### ①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

#### ● 미국 수입시장

- 중국 비중은 과거(2012~14년) 19.7%에서 최근(2022~24년) 15.0%로 감소
  - 산업별로는 기계(-13.4%p), 전기·전자(-11.5%p), 섬유·의복(-12.3%p) 등에서 중국 비중 감소
- EU, 멕시코 등 다른 주요국의 비중 증가
  - 한국(2.8% → 3.8%)의 비중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

#### ● 중국 수출시장

-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신흥국 비중 증가
  - 전기·전자(-5.2%p), 기계(-7.1%p) 등 주요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 감소
-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인도, 멕시코 등의 비중 증가

### ● 한국 수출시장

- 중국에 대한 비중이 과거 25.3%에서 20.7%로 감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11.4%에서 17.8%로 상승
  - 산업별로는 기계(+12.3%p), 자동차(+18.1%p)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서 미국 비중이 증가
- 중국 비중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중국 비중이 감소하였고 베트남(+11.8%p), 대만(+4.5%p) 등의 비중은 증가

### ● 한국 수입시장

- 지난 10년간 중국(16.3%→21.8%)과 미국(8.4%→11.3%)의 비중이 모두 상승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 증가
  - 미국으로부터는 원유, 석유가스 등 1차산품(광업) 수입이, 중국으로부터는 화학, 철강, 전자, 기계 등 분야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
- 대만, 베트남 등 신흥국 비중 증가

## ② 미국발 관세장벽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

### ● 중장기 시계열(2012~24년)을 이용한 분석

-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인한 중국의 미국 수출(혹은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받은 영향, 즉 관세로 인한 직접효과(direct effects)와 중국 이외 국가의 미국 수출(혹은 미국의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받은 영향, 즉 관세로 인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를 추정

### ●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

-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유의하게 감소

### ● 제3국(40개국 전체)의 경우 국별 이질성 등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양(+)의 증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본재만 일부 유의한 양(+)의 간접효과 확인

- 한국으로 한정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면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부 양(+)의 간접효과
  - 선행연구에서는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가 미약하게 추정된 원인으로 국별 이질성과 품목별 이질성을 이유로 제시하였고,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

### 3) 관세장벽 확산과 향후 무역 및 경제 변화

- Caliendo *et al.*(2019)에서 제안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의 정태분석 방법론 활용
  - 리카르도식 다국가-다산업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관세장벽의 확산이 무역과 가격,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단기와 장기 무역탄력성의 차이를 조달적 마찰을 통해 반영하여 분석
- 관세로 인해 단기에 큰 가격 상승과 무역 위축이 유발되고, 장기에는 공급자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무역과 실질임금의 손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확인
- 관세장벽의 확산이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광범위한 IEEPA 및 제232조 관세로 인해 산업별로 가격이 3~33% 이상 상승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형적인 보호무역의 비용을 부담
  -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나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과 우회 효과로 총수출의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내수 물가 하락과 명목임금 감소가 겹치면서 후생은 감소
  - 한국은 대미 수출 감소와 후생의 하락이 나타나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며, 미-중/미-멕시코 간 추후 협상 결과 등 상대가격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장기 충격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존재
  - 캐나다와 멕시코는 높은 수준의 북미 공급망과 중간재 의존도로 인해 여러 산업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 결과가 발견되었고 이는 강력한 역내 가치사슬을 통해 관세의 영향력이 강하게 전달됨을 시사

### 3. 대응 방향

- 그동안 한국은 관세 조치의 성격과 정책 목적을 파악하고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

표 1. 시기별 정부의 대응 비교

구분	트럼프 1기	바이든
협상 전략	쿼터 협상, 면제 요청 등 사후적 대응	IRA · CHIPS 이행지침 협상, EU와 공동입장 조율
통상안보	에너지 수입을 통한 무역흑자 완화, FTA 재협상	공급망 안보 법제화, IPEF 다자공조 강화
산업 지원	철강 중심 피해 완화, 수입대체 산업 유도	첨단산업 법제 정비(K-칩스법)
신시장전략	중국 의존도 완화	ASEAN, 인도 진출 가속화

자료: 저자 작성.

-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설정에 있어 글로벌 관세장벽 확대라는 외부 충격에 따른 경제 변수의 내생적 변화 방향을 고려
  -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는 약 40%에 달하며, 이러한 구조는 미·중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음.
    -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
    -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됨.
    -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의 표적 가능성
  -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방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동시에 선택적이고 표적화된 특징
    -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가능
    - 미국의 이익에 일견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예외 및 면제를 얻어내는 전략 필요
  - 우회수출에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 외국 수출 기업이 비용을 떠안지 않고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 우회수출(환적, transshipment)을 적극 검토할 유인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
    - 우회수출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도록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선제 대응
    - 국내 산업이 외국산 저가 덤핑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
    - 원산지 증명 요건을 강화하여 제3국 경우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기업은 무역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
    - 글로벌 우회수출·덤핑 동향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
  - 국내 피해기업 지원 확대
    - 정부는 복잡다단한 관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변화의 실시간 추적·대응 역량이 취약하므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

-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속해서 관찰, 추적,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 보완
  - 통상피해가 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통상피해 지원 범위 확대 필요
- 산업정책-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자국 중심의 전략적 보호무역 기조로 회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율의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술규제 등 복합적인 정책수단이 결합된 통상장벽이 존재
  - 그동안 한국은 WTO 보조금협정과 통상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신뢰성과 통상 분쟁 최소화 노력
  - 관세장벽이 확산되는 국제 환경은 한국에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KIEP**